2015년 순경 3차 경찰학개론 기출해설

해설 : 김재규 교수

※ 참고자료 : ▸ 기 – 기본서 경찰학개론(2015년 전정2판, 김재규 저)
▸ 객 – 객관식 경찰학개론(2015년 전정2판, 김재규 저)
▸ 토탈 – TOTAL기출문제 경찰학개론(2015년 개정판2쇄, 김재규 엮음)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 p20, 객 p25 문13, 토탈 p15 문6)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

① 비범죄화 ② 비경찰화
③ 사무통합 ④ 경찰국가

1. 정답 ②
해설 설문의 내용은 비경찰화에 대한 설명이다. 비범죄화란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국가가 형벌을 수단으로 특정한 종교적·도덕적 가치관을 강제하는 것은 그것이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닌 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2. 「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117·118, 객 p154 문13, 토탈 p52 문3)

①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③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정답 ④
해설 ① 경찰법 제1조
② 동법 제2조 제1항
③ 동법 제2조 제2항
④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11조 제2항).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121·122, 객 p158 문22, 토탈 p53 문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답 ②
해설 ① 경찰법 제5조 제2항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제1항).
③ 동법 제10조 제1항
④ 동법 제10조 제2항

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기 p211·213·225, 객 p292 문52)

㉠ 불심검문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검문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그 검문대상자로 하여금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때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20　　② 21
③ 22　　④ 23

4. 정답 ①
해설 ㉠ 6 + ㉡ 10 + ㉢ 3 + ㉣ 1 = 20
㉠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7항).
㉢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동법 제11조의2 제2항).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2조).

5. 다음 중 「경찰법」 상 국가경찰의 임무는 모두 몇 개인가? (기 p28, 토탈 p315 문8)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정답 ④
해설 설문의 경우 모두 「경찰법」 상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6.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162·163·167, 객 p222 문96, 토탈 p617 문6)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정답 ①
해설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② 동법 제80조 제3항

③ 동법 제80조 제5항
④ 동법 제83조 제3항

7.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p210·211, 객 p273 문11, 토탈 p554 문10·p665 문8)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정답 ③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3항).

8.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근거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기 p155, 객 p208 문66·p285 문38, 토탈 p353 문7)

① 경찰공무원법(무기휴대) -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사용)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휴대) - 경찰법(무기사용)
③ 경찰공무원법(무기휴대) - 경찰법(무기사용)

④ 경찰법(무기휴대) -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사용)

8. 정답 ①
해설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근거)할 수 있다.

9. 매슬로(Maslow)가 주장하는 5단계 기본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 p245, 객 p320 문26, 토탈 p91 문15)

① 안전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②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③ 존경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④ 생리적 욕구 -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9. 정답 ②
해설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생리적 욕구	수면, 목마름, 배고픔 등의 해결욕구나 성적 욕구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안전의 욕구	안전, 안정, 보호에 대한 욕구	신분보장, 연금제도
사회적 욕구 (애정의 욕구)	사랑, 소속감,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상담
존경의 욕구	존경, 명예, 인정, 확신의 욕구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자아실현 욕구	최상위의 욕구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려는 욕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단체 활동

1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221·222, 객 p283 문34, 토탈 p519 문8)

①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②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③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10. 정답 ②

해설 ②는 분사기 등의 사용 기준에 해당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및 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11. 정답 ①

해설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3조

③ 동법 제1조
④ 동법 제11조 제1항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p538·539·540, 객 p609 문23·24·25·26, 토탈 p654 문10·p724 문15)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정답 ②
해설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동법률 제5조
㉢ 동법률 제18조 제1항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동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동법률 제24조 제2항).

13.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 p414·415, 객 p478 문90·p479 문93, 토탈 p166 문44·p742 문11)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없다.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정답 ④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동법 제2조 제2호
㉢ 동법 제7조
㉣ 동법 제6조 제3항

14. 「통합방위법」 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 p520, 객 p590 문103, 토탈 p658 문16)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① 갑종사태 ② 을종사태
③ 병종사태 ④ 정종사태

14. 정답 ③
해설 설문은 「통합방위법」 상 병종사태에 대한 설명이다.
[통합방위사태의 유형(통합방위법 제2조)]

갑종사태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을종사태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병종사태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15. 「경비업법」 상 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 p366, 객 p437 문161, 토탈 p596 문12)

① 시설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② 호송경비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③ 기계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④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5. 정답 ④
해설 ① 기계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이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②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다목).
③ 시설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④ 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경비업법」 상 경비업무]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제2조 제1호 가목)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제2조 제1호 나목)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제2조 제1호 다목)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제2조 제1호 라목)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제2조 제1호 마목)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 p460, 토탈 p599 문16)
①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②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

③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16. 정답 ④
해설 ①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다(대판 1981.12.8, 81도1808).
②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4.23, 2004도1109).
③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2002.7.23, 2001도6281).
④ 대판 2002.10.25, 2002도4220

17.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443·444, 객 p515 문61, 토탈 p542 문30)

①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②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7. 정답 ③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② 동법 제2조 제3호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1호).
④ 동법 제2조 제14호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기 p567, 객 p638 문91, 토탈 p239 문53)

①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②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③ 국회의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④ 경찰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18. 정답 ④
해설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19.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p642·644·645, 토탈 p660 문19)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19. 정답 ②
해설 ① 보안관찰법 제3조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③ 동법 제5조 제2항
④ 동법 제7조

20.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 p693·694, 객 p752 문96, 토탈 p301 문46·p739 문40)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정답 ④
해설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3조).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7조 제4호).
③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호).
④ 동법 제9조 제2호